

오피니언

11

사설

계속되는 양캠 후마 입장차

필수 교양 수업 '빅뱅에서문명까지(빅문)'가 캠퍼스별로 수업 내용부터 형식까지 전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생들은 대학이 추구하는 방향에 부합하는 교양과목 이수를 통해, 전공은 다를지라도 대학 구성원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한다. 하지만 같은 수업이 캠퍼스별로 다른 교육과정으로 이뤄진 현 상황이 '원 캠퍼스'를 지향하는 우리학교 구성원의 인식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양캠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는 관련 정책 논의 과정에서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지난 6월 후마 절대평가 논의는 서울캠의 '일단 도입'과 국제캠의 '단계적 도입'의 견해 차이로 결렬됐다. 빅문을 바라보는 두 후마 교수진의 의견 차이도 이와 다르지 않다.

빅문 수업을 위한 교재인 '빅뱅에서 인간까지'는 현재 서울캠에

서만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캠에서는 빅문 수업이 교수마다 다른 커리큘럼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학기 국제캠에서 진행되는 10개의 빅문 강의계획서에서 '빅뱅에서 인간까지' 교재가 '교재 및 참고자료' 목록에 포함된 강의는 6개뿐이었다. 이마저도 해당 교재가 단독으로 수업에 사용되는 강의는 없다.

수업 방식도 차이를 보인다. 서울캠은 대부분의 수업이 두 교수가 분담해 가르치는 '팀티칭' 형식으로 진행된다. 반면 국제캠은 한 수업을 제외하고 모두 한 명의 교수가 빅문 수업 전체를 전담한다. 특정 분야를 전공한 교수 입장에서 물리학과 생명과학을 넘나드는 빅문 커리큘럼을 학생들에게 온전히 전달하기 무리다.

물론 국제캠 학생들은 대부분 이공계 학문을 전공하기 때문에 수업이 다르게 진행될 여지가 있

다. 국제캠 소속의 한 빅문 교수도 "이공계열이 많은 국제캠 특성상 담당 교수들이 심화 내용을 재량껏 첨가한다"라고 한다.

문제는 양캠 간 교양과목 편차가 빅문을 넘어서 전반으로 확산될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빅문과 같은 필수 과목인 '세계와시민'은 이번 학기 서울캠 수업 정원이 19명, 국제캠은 25명이다. 조를 이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수업 특성상 수업 정원이 30%가량 차이가 나는 것은 수업의 질 차이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양캠에 배분이수교과로 개설된 '고전읽기' 수업도 서울캠에는 12개 강의가 다양한 분야의 작품으로 개설돼 있지만, 국제캠에는 고작 3개뿐이다. 이마저도 45명이 정원인 서울캠과 달리 국제캠 수업은 정원이 60명이다. 따라서 고전 수업의 핵심인 토론 수업이 불가능해 일방적인 강의 방식

의 수업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절대평가 도입 논의 때도 그랬듯이 캠퍼스 간 통일된 교양수업 교재 집필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방식과 관점에서의 차이가 항상 드러나고 있다. 양캠 후마가 앞으로도 발생할 사안마다 다른 입장을 보이며 논의 결렬을 반복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계속되는 양캠 후마 입장 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수 간의 이해관계 충돌인지, 학문적 차이에서 오는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고민이 전제되지 않는 양캠 간 각종 논의는 결국 지금까지 그랬듯이 결렬에 이르는 비슷한 서사로 구성원의 답답증을 더하게 될 것이다. 파생되는 피해는 학생의 몫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세시봉

아프면 안돼요

김륜희 기자
poetry_5989@khu.ac.kr



"여러분, 추석 때 아프지 마세요" 전공의 미복귀 문제를 취재하던 중 한 의과대학 교수가 건넨 말이다. 장난스럽게 생각했지만, 그 경고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가 없는 의료 공백을 채우다 한계를 버티지 못한 전문의들은 대학병원을 떠나고 있다.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13531명 중 56.5%인 7684명의 사직이 수리됐다.

응급의학과와 같은 필수과 인력도 줄어들고 있다. 올해 상반기, 119 구급차 재이송 2645건 중 40.9%는 전문의 부재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에서만 문제가 되던 '응급실 뺑뺑이'가 대도시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7월 30일 서울의 편의점에서 쓰러진 40대 응급환자는 병원 14곳을 돌다 구급차에서 숨을 거뒀다.

부산에서는 폭염 속에 40대 남성이 쓰러지며 머리를 크게 다쳤지만, 부산에서는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어 숨지고 말았다.

응급실 뺑뺑이가 지금도 나타나는 가운데, 병원이 문을 닫아 응급실만 운영하는 추석에는 더욱 큰 의료대란이 예상된다.

화상, 관통상, 교통사고가 연평균 발생량보다 높은 추석에 응급 의료환자가 몰리게 되면, 의료 대란을 피하기는 어렵다.

취재 중 의과대학 교수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이 폐쇄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상 평균적으로 한 해 5만 명 정도가 응급실에서 사망한다. 과장된 예측일 수는 있지만 그의 경고를 무시할 수는 없다.

'추석 의료 대란'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현재 정부의 대책은 '의료 대란' 해결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4000개소 이상 연휴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중증 전담응급실 29개 이상을 지정해 운영한다. 하지만 전국 권역 응급의료센터 내 전문의는 23년 4분기 910명에서 24년 8월 기준 513명으로 43% 감소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프지 않아야 할' 의무가 생긴 꼴이다. 즐거운 추석이라는 정겨운 인사 대신, "추석때 아프면 안돼요"란 인사를 건네야 할 지경이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전기차 화재 예방, 현실적 대책 마련은

전기차 딜레마

하시연 기자
hse0622@khu.ac.kr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가 만연하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많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타상행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충전율 90% 초과하는 전기자동차의 진입을 막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오는 9월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기차 과충전은 화재 발생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정부의 쏟아내기 식 정책으로 인해 전기차는 '움직이는 시한 폭탄'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내연기관차에 비해 폭발률이 낮음에도 말이다. 일부 건물은 전기자동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기도 해 사람들의 갈등만 심화되는 상황이다.

기존 전기차 관련 법이 현재 상

황과 상충하는 부분도 한몫한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전체 주차면수 대비 2%를 충족해야 한다. 우리학교도 이 법의 울타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서울캠은 지난 8월 말까지 충전소 13개를 더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예산 문제와 전기차 화재 이슈로 내년 1월로 미룬 상태다.

지하 충전소는 사고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힘들다는 허점이 있다. 지상에 충전소를 확보하자니 공간이 문제다. 국제캠은 경기도 조례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대안 마련도 힘든 상황이다. 그저 사고가 안 나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학교는 지자체의 방침과 학내 구성원들의 우려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정부 정책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때 의미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기차와 관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단순한 규제보다는 철저한 과학적 검토와 검증을 거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만평 지자체 방침과 구성원 우려, 딜레마에 빠진 학교

교시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조병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아이피디